

주요성과

2018

공공기관 CEO 워크숍(VIP주제) 우수사례 선정

2020

중소기업 지원플랫폼 인지도 1위 달성
「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

2021

文정부 우수 반부패 100대 시책 및 정부혁신 64대 과제 선정
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「SOC 기술마켓」 운영기관 선정
대구광역시 신기술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
조달청 주관 혁신조달 우수기관 선정

업무 담당자

담당부서	주요업무	연락처
기술심사처 기술마켓팀	신기술 활용	054-811-3732
	신기술 등록	054-811-3734
	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	054-811-3742
기술심사처 SOC 기술마켓팀	제도 수립, 위원회 운영	054-811-3736
	SOC 등록, 혁신제품 지정	054-811-3738

접속방법

포털사이트 “도공기술마켓” 검색

or

공정·투명·상생의
온라인 신기술 플랫폼

道公기술마켓

道公기술마켓은

대한민국 도로분야 발전을 위해
더 좋은 신기술을 만들고,
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
공공기관 최초의
온라인 신기술 플랫폼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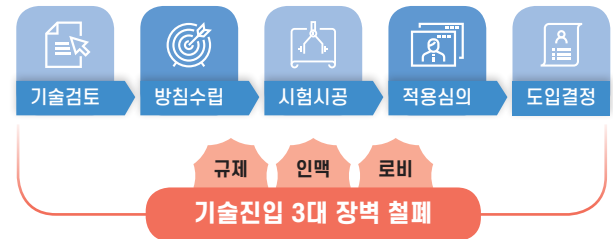
道公기술마켓이란

개요

중소기업(개인)을 대상으로, 기 개발된 신기술을 검증하고 미 개발된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신기술 상품화와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최초의 온라인 신기술 플랫폼(2018. 1 공식 오픈)

종전

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진입 프로세스



개선

간단하고 투명한 오픈 플랫폼



운영체계

투명·혁신·상생기반의 중소기업 All-Care 시스템 구축



신기술 등록

개요

중소기업(개인)이 완성된 신기술을 “상시” 제안하고 도공의 검증을 거쳐 道公기술마켓에 등록 및 활용하는 제도

대상

정부 인증신기술, 특허 등 완성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(개인)

1 상시등록 상시 제안한 신기술에 대해 검증 후 등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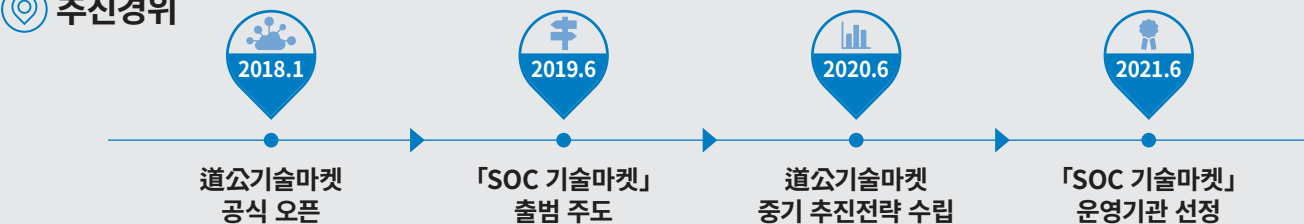
※ 단, 정부 인증신기술은 사전검토까지 시행 후 등록(등록심의 면제)

2 일괄등록 도공 자체 심의 등을 통해 고속도로에 적용된 기술은 사전검토와 등록심의 면제



※ 특정공법, 신형식교량, 실무적용성 심의, 도공(본사)과 신기술 협약 체결

추진경위



신기술 주요 활용방안

대내

성장디딤돌 되어주기 제도

- 도공 활용실적이 없는 신기술에 대해 총 3회 특정공법 심의 면제

현장 맞춤형 신기술 공모제

- 현장 필요 신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참여

공공기관 최초 道公기술마켓 경진대회 운영

- 신기술 활용을 통한 기존 대비 성능향상 여부 평가

고속도로 설계·건설·유지관리 분야에 道公기술마켓 등록 신기술 우선적용

대외

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「SOC 기술마켓」 등록·활용

- 참여기관 공동 검증을 통한 신기술 상품화 및 홍보 지원

※ 기획재정부 주관, 도공·NH 등 14개 공공기관 참여

혁신제품(Fast-trackIII) 지정

- 국민생활, 혁신성장 관련 자재(제품)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

※ 지정 시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과 3년간 수의계약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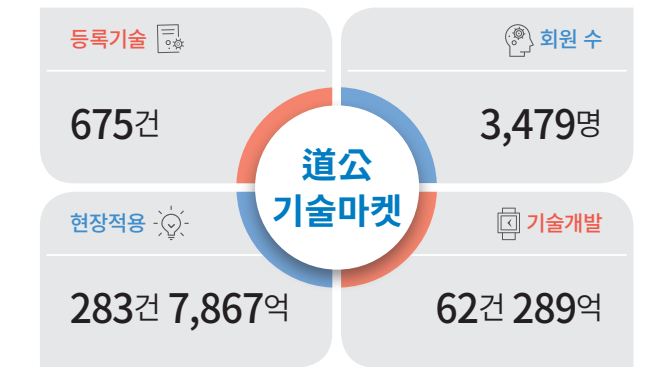
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참여

- 시험시공 지원, 설계반영 등 우수기술의 공공현장 적용

타 기관과 신기술 협력체계 구축

- 지자체, 민자고속도로 등과 우수기술 공유, 개발기술 실증지원

그간의 운영실적



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

개요

중소기업(개인사업자)을 대상으로 미 완성된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구매까지 보장하는 제도

대상

특허 등 관련분야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(개인사업자)

구분	주관	자금지원	판로지원
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	중기부 (기정원)	최대 2년 5.6억원	정부 지원금 1배 이상 구매
② 道公기술마켓 기술R&D	중기부 (기정원)	최대 2년 10억원	도공 지원금 1배 이상 구매
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	도공	최대 1년 0.5억원	도공 지원금 1배 이상 구매
④ 道公 Test-Bed 지원사업	도공	최대 2년 1억원	도공 지원금 1배 이상 구매, 테스트베드 제공
⑤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사업	국토부 (KAIA)	최대 3년 13억원	테스트베드 제공, 첫 구매

※ 자금지원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